



【문10】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?

- ①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, 입국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.
-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고 본다.
- ③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,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.
- ④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할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.

【문11】 다음 중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
-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
- ③ 국무총리에 대한 출석요구권
- ④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

【문12】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? (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)

- ① 대통령은 그의 지휘·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, 국가정보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.
- ②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, 국회사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·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.
- ④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을 임명한다.

【문13】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언론·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허용된다.
- ② 판례에 의하면 알권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언론·출판의 자유의 주체는 언론기관이다.
- ④ 외국인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.

【문14】 우리 헌법조문상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?

- ① 직업선택의 자유
- ② 양심의 자유
- ③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
- ④ 행복추구권

【문15】 다음 중 헌법에 경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은행의 자율성은 보장된다.
- ② 농지의 소작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.
- ③ 소비자보호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- ④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.

【문16】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평등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를 가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.
- ②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.
- ③ 정치자금의 모금에 있어서 정당을 우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.
- ④ 감사의 불기소처분도 평등권을 매개로 위헌심사가 가능하다.

【문17】 다음 중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?

- ①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,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②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자를,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.
-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
-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, 탄핵의 결정,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【문18】 다음 중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㉠ 무죄추정의 원칙
- ㉡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
- ㉢ 진술거부권
- ㉣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
- 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

- ① ㉠㉡㉢
- ② ㉠㉡㉤
- ③ ㉠㉢㉤
- ④ ㉠㉡㉢㉤

【문19】 지방자치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?

- ① 읍·면·동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② 현행 헌법은 지방의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【문20】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?

- ① 우리 헌법은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
-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피고인에게도 체포·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.
- ④ 법원의 체포·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.

【문21】 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)

- ①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.
- ② 미결수용자의 일반인에 대한 서신 및 변호인에 대한 서신의 검열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허용된다.
- ③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.
- ④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전기통신감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.

【문22】 다음 중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?

- 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
- ②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
- ③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
- ④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

【문23】 국회의원 자격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?

- 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, 그 의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.
- ②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의 허가를 요하고,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국회의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.
- ④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, 무자격 결정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【문24】 다음 중 대법원장, 대법관,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전체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제2공화국 헌법에 의하면,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였다.

【문25】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국가의 세입·세출의 결산,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.
-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
- 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④ 감사원은 세입·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